제주항공 참사 100일…'착륙하지 못한' 과제들

조류 충돌·엔진이상 등 원인 밝혀낸 것 하나도 없어
원인규명 첫 단계 '사고조사보고서' 1년도 더 남아
유족 지원 더디고 무안공항 재개항 시기도 불투명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오는 7일로 발생 100일을 맞는다. 하지만 시간만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원인 규명의 첫 단계인 사고조사보고서는 1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무안공항 등 시설 개선, 무안공항 운영 재개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3일 제주항공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 '분석 및 시험' 단계를 진행 중이다. 분석 및 시험 단계는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이뤄지는 12단계 중 절반인 6단계에 해당한다.

사조위는 사고기 블랙박스(CVR·FDR) 기록이 사고 직전 약 4분 7초간 끊긴 사실을 확인했지만 아직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재구성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

사고 당시 엔진 양쪽에서 발견된 깃털과 혈흔의 경우 유전자 분석을 진행해 '가창오리'로 특정하면서 조류 충돌을 확인했지만 조류 충돌이 기체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사고와의 관련성 등은 여전히 분석중이다.

사고기의 엔진도 국내가 아닌, 제작사인 프랑스로 보내졌다. 조사위는 5월 현지로 이동해 본격 조사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조사·분석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청회 등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기까지 1년 5~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어떻게 참사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1년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수사도 답답할 정도도 더디다. 전남경찰청은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키운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시설물에 수사 초점을 맞췄지만 여전히 구조물 설치 경위와 피해 확대 요인 등을 조사중이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가 착륙할 때 활주로 중심선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항행안전시설로, 사고 당시 기체가 동체 착륙 도중 로컬라이저가 설치돼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에 충돌하면서 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시뮬레이션 분석을 의뢰하고 사고 당시 기체 속도, 기종, 구조물 높이와 위치 등 가능한 모든 입력값을 반영해 당시 상황과 유사한 조건으로 둔덕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그러나 당시 구조물 설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의 경우 기억의 불명확성과 자료 부족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방위각 구조물 설치 과정에서의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도 답답할 정도다. 경찰은 무안공항의 해당 방위각 구조물이 설치된 2007년과 개량된 2020년 문서 등을 확보해 조사중이지만 국민들에게 발표할 수준은 없다는 입장이다.

공항 시설 개선 사업도 진행형으로, 무안공항 재개항 여부도 불투명하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무안공항을 포함한 전국 6개 공항의 로컬라이저 둔덕을 모두 철거하고 시설 재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항별로 개선안을 마련해 설계가 완료된 공항부터 순차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올해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무안공항의 경우 국토부의 '단계별 운항 대안'에 따라 5월까지 사고 수습과 활주로 정리 등을 진행하고 8월까지 활주로 항행안전등 보수를 진행한 뒤 활주로 주변 계기착륙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되는 9월 이후 사고가 발생한 활주로 반대 방향에 대해 운항이 가능할 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지만 불확실하다.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은 유가족협의회와 함께 오는 8일 국회 소위 법안 의결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 중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추모 공간 조성 등 개별 사업 방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무안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HL8088편이 동체 착륙 후 활주로 끝 '로컬라이저'와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점등식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소운 스님)는 3일 오후 6시 30분 5·18민주광장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는 봉축탑 점등식 및 탑돌이를 진행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외국인 노동자 "이름표 붙은 안전모 받는다"

전남노동권익센터, 6일 담양서 첫 전달식 개최
5~11월 현장 순회…노동존중 문화 확산 등 도모

외국인노동자에게 이름이 적힌 안전모〈사진〉를 나눠주는 '이주노동자 안전모 및 이름 불러주기' 사업이 담양에서 첫 전달식을 연다.

광주·전남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이름 대신 '야' 또는 '인마'로 불리면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산업재해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는 상황〈광주일보 2024년 12월 24일 7면〉을 타개하기 위한 첫 시도다.

전남노동권익센터는 오는 6일 오전 10시, 담양 금성면 담양안전체험교육장에서 미얀마, 인도네시아, 네팔 등 출신의 외국인노동자 30여명을 초청해 산업안전체험 및 이름 스티커가 부착된 안전모를 지급한다.

행사는 광주노동권익센터, 전남노동권익센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한다.

사업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야', '너' 등 인격 없는 호칭으로 불리는 것이 만연한 노동 현장 문화를 바꾸기 위한 캠페인으로서 추진됐다. 이름을 불러주는 작은 실천을 통해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안전모 지급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도 함께 도모한다는 취지다.

언어와 안전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노동자는 산업재해의 주요 취약계층으로 꼽힌다.

실제로 광주·전남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외국인노동자는 2019년 241명, 2020년 258명, 2021년 259명, 2022년 256명, 2023년 289명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전남노동권익센터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의 '2025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총 2100만 원의 예산(국비·지방비 각 1050만 원)을 지원받아 이번 사업을 추진해 왔다. 센터는 5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주요 산업현장을 순회하며 안전모 보급과 인권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노동의 존엄은 이름을 부르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외국인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드는 데 지역사회가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4월 4일…완연한 봄이 온다 광주·전남 낮·밤 기온차 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이뤄지는 4일은 낮과 밤 기온 차가 큰 전형적인 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4일 광주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기온은 13~18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에 달하겠다. 미세먼지의 경우 광주, 전남 등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4일 새벽 아침까지 서해 남부 해상에 안개가 끼면서 사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광주·전남에는 5일 5㎜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